

## 청년농업인 육성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 Present Status of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최영창\*\* · 박은식\*\*\* · 고정숙\*\*\*\* · 조영숙\*\*\*\*\*

Yeong Chang Choe · Eun Shik Park · Jeong Sook Ko · Young Sook Cho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future improvement for upbringing the young farmers' workforce in rural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agricultural workforce and young farmers.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agricultural workforce staff of city and county extension center about role, development strategy of young farmers' workers. The total of 145 extension educators in charge of workforce section at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at city and county level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137 data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trategy for the upbringing young farmers should be establish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2) The status for the young farmers' policy must be placed high

\* 이 연구는 2007년도 농촌진흥청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e-mail: ab7851@rda.go.kr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관. e-mail: parkes@rda.go.kr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사. e-mail: kojs@rda.go.kr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사. e-mail: joys@rda.go.kr

er than present situation. 3) The systems and rules should be deregulated for the secure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4) Agricultural income sources should be developed extensively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주요어(Key word): 청년농업인(young farmer), 농촌지도자(rural leader)

## 1. 서 론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확산 등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 농업·농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농촌의 문제 중에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대한 문제, 또는 포괄적으로 농업인력의 수준 및 그 육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강대구, 2004).

우리 나라의 농업인력의 구조는 고령화, 여성화와 더불어 후계세대의 절대부족이라는 진퇴양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대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1.6%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주 중 0.1%만이 20대(농림업 주요통계, 2007) 현재의 인력구조의 문제와 향후 그 비율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와 영농정착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을 유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농업의 위기는 비단 농촌지역사회와 농업인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볼 수는 없다.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

량공급을 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농업종사 인구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농업인들 중 상당수가 생산이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영세농이나 자급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인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대처하고 최근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업생산자의 확보와 생산기반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군다나 세계 농산물시장의 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가격불안정과 농업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유지는 필수적이다.

신규 취농 인구의 확보는 어떻게 유능한 인력이 농업인구로 유입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며, 정착한 사람들의 능력개발과 유출방지는 그들이 농업에 매력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신규 농업인력 양성 대책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을 평가하고, 청년농업인의 신규취농활동의 애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촌인력의 핵심인력인 청장년층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농촌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인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기관의 지도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영농정착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청년농업인 현황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구조는 급격한 노령화와 젊은층의 영농취업기피, 이농증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촌인력의 불균형과 후계세대의 부족은 향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청년층 농업인력의 문제는 첫째, 신규 취농인구의 절대부족과, 둘째, 청년층 농업인의 이농현상이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표 1>은 연령별 농림업 취업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령별 농림업 취업 현황

	총수 Total	15~29세 Years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Years & over
97	2,285	75	5	70	282	434	597	896
98	2,397	105	8	97	283	444	640	925
99	2,302	103	7	96	249	417	581	952
00	2,243	79	5	74	218	404	553	989
01	2,148	67	6	61	184	382	518	998
02	2,069	51	4	46	145	372	489	1,013
03	1,950	48	4	44	127	341	449	985
04	1,825	36	3	33	105	306	417	961
05	1,815	29	3	26	84	286	421	995
06	1,785	29	2	26	82	271	411	992

자료 : 2007 농림업 주요 통계

1990년대 후반에 20대 청년농업인 숫자는 90천명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는 매년 5천~1만 5천명씩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26천명 수준으로 전체 농림업취업자 1,785천명의 1.6%수준으로 감소하였다. 90년대 후반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기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신규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으로의 청년 인력이 유입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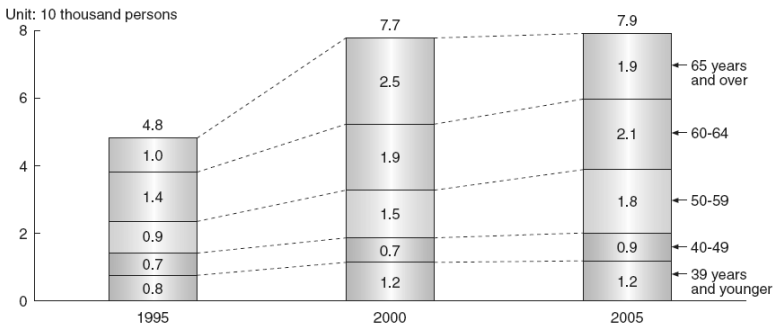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생중 2010년에는 매년 최소 500명에서 최대 700명선이 농업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중 매년 1,400명 내외가 농업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대로의 추세라면, 2010년경에는 대략 1,900명~2,100명 정도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모, 2006). 이 밖에 귀농자의 경우 1998년과 1999년과 같이 이상적으로 많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20대에서 100여명 수준, 30대에서 300여명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신규진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정규학교 졸업과 귀농으로 인한 청년농업인 유입인구는 매년 약 2,00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림업 취업자 중 20대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20대 청년농업인의 탈농 현상 심화되고 있는데, 2000년 74천명에서 2006년에는 26천명으로 불과 6년만에 1/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림업 신규취업자의 수를 감안하면 매년 약 5,000명~10,000명의 농림업 취업자가 이농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5년마다 국가인적자원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림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연간 약 2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렇지만 공급되는 수준은 약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농림업 취업자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OECD가입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60대 고령자의 비율이 50%이상이고,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농업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덜란드의 와게닝대학은 매년 6,000여명의 농업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대학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림업 신규취업의 구조를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에는 약 79천명이 농림업에 새롭게 농업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60세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의 경우도 12천명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젊은층의 농림업 신규취업이 우리나라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일본의 신규농업인 유입 현황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청(2007)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의 노령화와 과소화, 연령층의 심각한 불균형에 따른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농업계 고등교육육성정책과 신규 및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신규 취농 확대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민연태, 2005).

① 농업인턴제: 18-44세 미취업 청(소)년, 신지식농업인을 우수 경영체에서 연수하도록 하는 제도

② 대학생 창업연수: 32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에 대해 학교 및 농장에서 이론, 실기 및 현장체험기회 제공

③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졸업후 농업을 희망하는 농과대 2학년 대상으로 3년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후 창업교육 운영

④ 농고현장체험교육: 현장체험교육을 지원하고 동일계 진학 및 창업진로 강화, 정부부처 위탁 특성화 실업고 육성 추진계획과 연계

⑤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만 45세 미만의 영농희망자에 대한 영농이론, 실습, 영농설계과정 이수 지원

## 2.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농업인력육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진모, 2006; 강대구, 2004; 김진구, 2003; 정철영·이용환·나승일, 2002; 신익식, 2002; 정철영, 2002; 김재기, 1999 박문호, 2003; 정기환, 2002; 진형삼, 1993; 이영대, 1993; 윤호섭, 1992; 정명채, 1991 등). 이 연구들 중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과 육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철영(2002)는 농업인력의 신규진입의 문제점을 ① 영농기반 조성자금 및 시설자금 확보 곤란, 농지확보문제, 영농기술부족, 후계농업인 연령 및 학력제한 등의 진입에 대한 문제점, ② 농업비전 불투명, 가격 및 판로문제 등 농업에 대한 불투명성, ③ 열악한 생활환경, 결혼문제 등 사회·문화적 문제 등을 들고 있다.

강대구(2004)는 ① 농업인력의 확보 단계에서 농업인력 수급전망 미흡, 예비농업인력의 유인 미흡, 여성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미흡,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농업인력의 과부족 문제 심화를 들었고, ② 농업인력 신규진입의 문제점을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문제, 귀농정착 지원의 문제 등을 들었다.

〈표 2〉 농업인력 수급의 문제점(강대구, 2004)

문제점		세부 논의
농업인력의 확보	농업인력 수급 전망 미흡	- 농업인력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수준별 수급 전망이 이루어져야 함.
	예비 농업인력의 유인 미흡	- 농업관련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의 안정된 직업 보장, 발전가능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유인가 마련
	여성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미흡	- 농업인력의 부족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 농촌인구의 감소문제는 공공 서비스 시설의 이탈을 초래하고, 안정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치 이상의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가 확보되어야 함
	농업인력의 과부족 문제 심화	- 농업인력의 노령화, 부녀화 및 경작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의 증대 등이 문제되고 있음.
농업인력 신규 진입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	-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계 부족 - 농업계 학력인정에 따른 점수가 낮아서 농업계 인력의 유도 미약 - 농과계/비농과계의 교육차별화 정도가 약하고, 프로그램 또한 빈약 - 선발과정상의 공정성 결여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문제	- 군복무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겨지고 있음. - 농업생산에 대한 대상자 위주로 선정 - 후계농업인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 부족
	귀농정착 지원의 문제	- 영농지식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습득 기회 제공 필요 - 지속적이고 신속한 영농정보의 제공 미흡 - 귀농 정착 자금 지원 기준이 모호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농업유입단계에서 잠재농업인에 대해 어린이 대상 농업 체험 및 교육활동 강화, 언론인과 주요 여론 등에 대한 농업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시지역 농업교육활동 지원, 체험·실습의 결과 발표나 경진대회 실시, 4-H의 날이나 농업박람회 개최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고, 창업준비단계에서는 농업계 학교의 교육강화, 농업교육에 관련된 훈련과정 실시, 후견인제 도입, 4-H과제활동 강화, 창업연수과정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강대구, 2004).

김진모(2006)는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으로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와 일반인에 대한 농업교육확대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신규농업인력 확대를 위해 후계농선발 자격의 나이제한 폐지, 청소년 직업조직들의 농업안내사업과 경진행사의 지원, 다양한 경로의 직접적 인력 확보 방안 활용, 창업후견인제 도입, 생산농업의 복합산업화 유도 및 인력공급 방안 검토, 후계농업인 선발과 육성과정 일치, 농업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 확대, 농업인력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제도 보완, 연수나 기반확보 자금을 대한 저리나 무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한 연구들은 최근의 농업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천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농업인력확보를 농업취업이전단계와 취업단계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취업단계에 있어서는 신규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재검토와 교육 강화, 정착단계에서의 문제점 완화 및 정착과 창업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3.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3.1.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개 시군에서 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157개소에 각각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서신 및 메일로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 및 응답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2007년 8월에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육성현황과 기관의 역량, 정책평가 등을 포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진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18	86.1
	여	19	13.9
연 령	30세미만	14	10.2
	30-40세 미만	51	37.2
	40-50세 미만	54	39.4
	50세 이상	18	13.1
학 력	고졸	13	9.5
	전문대졸	12	8.8
	대졸	99	72.3
	대학원졸	13	9.5
직 책	계장·팀장	32	23.4
	담당자	105	76.6
계		137	100

### 3.2. 농촌지도기관의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3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 24.4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를 5년전(2002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뿐이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3%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비율은 평균 70.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에 20대 청년농업인이 46천명에서 2006년 말 26천명으로 43.5%로 수준인데 비해 실제보다 비교적 적게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20대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청년농업인 변화추이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청년농업인 수 (평균)	비율(%) (2002년=100)
증가	1	0.7	9	-
비슷한 수준	24	17.9	17.4	100
감소	109	81.3	26.1	63.7
합계	134	100	24.4	70.3

과거에 비해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줄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 '농업전망의 불투명'에 응답한 비율이 51.8%로 가장 높았고, '소득의 불안정'이 20.4%로 나타나 향후 농업에 대한 전망이나 소득의 보장에 대해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의 영세'와 '영농자금의 부족'이 각각 6.6%, 5.1%로 영농기반이나 자금부족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

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취농기피 요인에 대한 조사(나승일, 2004; 정철영, 2002)에서 보다 농업전망의 불투명이나 소득의 불안정에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WTO, FTA협상 등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청년농업인의 이농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농업전망의 불투명	71	51.8
소득의 불안정	28	20.4
가족의 취농반대	4	2.9
자녀의 교육	7	5.1
기술의 부족	-	-
영농규모의 영세	9	6.6
영농자금의 부족	7	5.1
지역내 일자리의 증가	-	-
기타	5	3.8
무응답	6	4.4
합계	137	100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업을 각각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학습단체(4-H회)육성'이 1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44.5%,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3순위에서 '후계농업인 육성', '한국농전 학사 및 졸업생관리', '현황파악, 육성정책수립'이었으며, '창업농, 벤처농 지원'이나 '생산자조직 참여 독려'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회 육성,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한농전학사관리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계된 사

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1~3순위	
	응답자수(명)	백분율(%)	응답자수(명)	백분율(%)
현황파악, 육성정책수립	1	12.4	49	12.1
학습단체(4-H회) 육성	61	44.5	124	30.6
후계농업인 육성	50	36.5	117	28.9
창업농, 벤처농 지원	3	2.2	23	5.7
생산자조직 참여독려	4	2.9	26	6.4
한국농전 학사 및 졸업생관리	2	1.5	66	16.3
합계	137	100	405	100

### 3.3.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 3.3.1.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위상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 단체들의 청년농업인육성 사업에 대한 위상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7%가 ‘독립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5%가 ‘필요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응답은 23%, ‘보조적인 사업’이 21.2%, ‘핵심적인 사업’이 2.9%로 나타나 각 농업기술센터별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매우 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몇몇 시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농업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의 위상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가장 핵심적인 사업영역	4	2.9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사업영역의 하나	32	23.4
독립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37	27.0
다른 활동영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사업	29	21.2
필요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사업	35	25.5
합계	137	100

### 3.3.2. 기관(농업기술센터)의 기관역량 평가

농촌지도공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관의 여건과 능력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3.23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했으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단기 전략의 유무', '정책적 지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절성', '인력육성담당자 수의 적절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며, '인력육성 담당자의 전문성'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관심정도와 인력육성담당자의 전문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반 여건(전략, 정책, 예산, 인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육성 역량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정도	10 (7.3)	26 (19.0)	36 (26.3)	52 (38.0)	13 (9.5)	3.23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단기 전략	17 (12.4)	42 (30.7)	54 (39.4)	19 (13.9)	5 (3.6)	2.66
정책적 지원의 적절성	14 (10.2)	35 (25.5)	47 (34.3)	37 (27.0)	4 (2.9)	2.87
예산 규모의 적절성	26 (19.0)	45 (32.8)	43 (31.4)	19 (13.9)	4 (2.9)	2.49
인력육성 담당자 수의 적절성	40 (29.2)	31 (22.6)	37 (27.0)	26 (19.0)	2 (1.5)	2.40
인력육성 담당자의 전문성	5 (3.6)	17 (12.4)	36 (26.3)	60 (43.8)	18 (13.1)	3.51

### 3.3.3. 후계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후계농업인력육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 농림부의 신규취농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사업효과의 평가는 대체로 70~8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업별 효과정도에 대해서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면 ‘후견인제도’, ‘농대 영농정착과정 운영’, ‘직업훈련과정’,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농업인턴제	10 (7.3)	24 (17.5)	42 (30.7)	52 (38.0)	9 (6.6)	3.19
대학생 창업연수	9 (7.3)	22 (17.5)	51 (30.7)	47 (38.0)	6 (6.6)	3.14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3 (2.2)	16 (11.9)	54 (40.0)	51 (37.8)	11 (8.1)	3.38
농고 현장체험교육강화	8 (5.8)	10 (7.3)	56 (40.9)	55 (40.1)	6 (4.4)	3.30
직업훈련과정 운영	5 (3.7)	16 (11.9)	54 (40.0)	51 (37.8)	9 (6.7)	3.32
후견인 제도	7 (5.1)	25 (18.2)	59 (43.1)	31 (22.6)	13 (9.5)	3.74

### 3.4.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년농업인 확보와 안정적 농업정책을 위해 국가수준(중앙정부/농림부)와 지역수준(지자체/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방한 질문에서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응답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1. 국가수준(중앙정부/농림부)에서의 역할 강화

국가수준에서 청년농업인의 확보와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육성정책의 수립과 영농정착자금의 확대지원 및 실질적인 혜택 부여, 교육기능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 및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사업이나 관리부서를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에 농심함양을 위한 학교4-H회의 프로그램 및 예산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지원사업비의 대폭 상향조정과 지원의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1억원 안팎의 후계농 지원사업비를 3~5억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나 보증인의 자산을 담보로 요구함에 따라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청년농업인에 대해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새롭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직불이양제 등을 통해 국가가 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나이가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차해 주어, 사실상 영농기반이 미약한 젊은 층이 영농기반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 영농상담을 통한 사례별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장기적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자격(교육 및 훈련 이수)을 갖추고 있으면서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농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인력육성 담당자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력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3.4.2.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 방안

지역에서의 청년농업인 지원 및 영농정착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와 유대강화, 소득작목개발과 후계농업인 우선지원, 문화공간의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조직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4-H회 등을 통

해 조직원들의 유대강화와 단순친목만이 아닌 애향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단체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농업인 조직이 한농연 등 타단체와의 관계형성 및 공동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참여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개발사업의 추진이다. 조직활동을 통해 유대가 강화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영농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농기술교육과 전문지도자를 통한 품목별 밀착정밀지도가 필요하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내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이 좋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자체가 보증을 하여 필요한 자금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결 론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신규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년농업인의 이농을 줄여나가고, 신규 농업인이 원활히 농촌생활과 농업경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에 대한 현황파악과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20대 청년농업인 숫자는 대략 2만6천명(농림업주요통계,

2007)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시군농업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숫자는 전체의 2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매년 5,000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이 이농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타 연령층에서의 이농보다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수준에서 농업인력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수요예측과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청년농업인의 현황파악과 이들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년농업인에 정책에 대한 위상의 제고가 필요하다. 과거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사업에서 그 역할과 위상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 농촌지도공무원의 단지 2.9%만이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의 영역이라고 응답했으며, 절반 정도가 보조적인 사업이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급격한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과소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농업인의 확보와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한 내용이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나 보증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이면 자금확보가 극히 어렵고, 영농자금의 대출한도도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창업농이나 후계농 자금지원 조건에서 이자율을 대폭 낮추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영농정착 의지가 확고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 주는 등 농업기반을 확보가 보

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차원에서 소득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청년농업인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조직의 활성화와 영농기술교육과 전문지도자교육을 통한 소득구조 창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내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농업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기술습득의 속도가 빠르고 IT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역내 소득원을 창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지역내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휴현. (2007). 개방화와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 2007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 강대구.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육성 방안. 농림부.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김경덕. (1998).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모, et al. (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용역보고서
- 나승일, 정철영, 김진모, & 안강현. (2005).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서울: 농림부.
- 농림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수산성. (2007). *Annual Report on Food; Agricultural and Rural Area in Japan*. 일본 농림수산성.
- 마상진, & 김영생. (2005).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연태. (2005). 정예농업인력 육성 정책, 정예농업인력육성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 안덕현, et al.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화성: 한국농업전문학교.
- 이영대, &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 허영준. (2001).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1), 1-24.
- 정철영.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4). 1-24.
- 정철영, 이용환, & 나승일. (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 서울대학교